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3-제5호(Vol. 28호)」

본 자료는 2023. 10. 13.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 강원도가 경제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토지구제 	국회예산정책처 강원연구원
2. 재정분야 (p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재정동향 2023년 8월호 •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 및 처방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연구소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p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p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가 10년 내 GRDP 두 배 하려면? •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강원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5. 뉴스브리핑 (p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속도낸다 •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24년 연수직 인력규모 축소없다 •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 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1. 경제

출처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1.1%, 2024년 2.0%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 요인
 -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 25%)하는 약점을 노출하였으며, IMF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
 - 7월까지 국세 수입(누계)은 지난해 대비 43.4조원 감소, 특히 지방정부 경상이전 재정 집행률이 부진.
-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
 -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하여 총인구는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 전망
 -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 수준이었다가 하락하여 2025~2027년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강원도가 경제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토지규제

(내용 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강원도 토지규제 심각하다 : 강원도 면적의 약 1.5배인 토지규제」에 의하면 강원도 10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 총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1.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토지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유용성 및 효율성 저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투입 요소인 인구 및 사업체 유출을 유발하고, 이러한 투입 측면 악화로 규제부과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이 감소하며, 지방정부의 재정분담능력이 약화되어 투입 요소의 유출을 다시 초래.
- 토지규제 부과가 강원도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우선 투입 측면에서 해당 지역 토지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 규제가 추가 부과되어 규제 지수가 10 증가하면 5,032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547.1개의 사업체 및 34.6개의 제조업 사업체 수가 감소함.
- 과도하게 부과된 토지규제를 경제성장 친화적인 규제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과된 규제에 의한 총 피해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 강원도 지역의 입지규제로 인해 생성된 국가 전체 편익에 강원도가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규제 피해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강원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특례의 적극적 활용 필요.

2. 재정

출처

■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3.8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2조 원 감소한 394.4조 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3.5조 원 감소한 425.8조 원.
- 통합재정수지는 31.3조 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7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0조 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3조 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도 각각 6.6조 원, 1.9조 원 개선됨.
- 한편,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전월 대비 12.1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임.

■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 및 처방

(내용 요약) [바로가기](#)

나라살림연구소

보통교부세 9.9조 원, 지방소득세 4.3조 원, 지방소비세 2.4조 원, 부동산교부세 1조 원, 특별교부세 0.3조 등

-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국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
 - 부동산 감세 정책에 따른 결과로 지방세수의 급감 현실화
 -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 재정의 위기로 변화할 수 있음.
 - 2023년 지자체 예산,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대폭 축소 예상
 - 2022년 이미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 2.1조 원 감액
 - 2023년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9.9조 원 등 정률분교부세 10.2조 원 감소
 - 국세 재 추계에 따라 2023년에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7.7조 원 추가 감소 예상
 - 2024년 지방교부세 8.5조 원 급감
- 내년도에 예상되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은 중앙정부의 분담과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3. 재정 · 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3.10.4. 시행 '23.10.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 통지, 실적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33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방법을 마련하고,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 기준을 정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3.9.26. 시행 '23.1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23.9.29 시행 '23.9.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업인의 영농·영어를 위한 기술·경영 교육,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정착지원 사업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강원도가 10년 내 GRDP 두 배 하려면?

(내용 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51.2조 원, 17개 시도 중 13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2.46%.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21년 확정자료 강원도지역내총생산 실적. 「미래강원 2032」발전전략에서 제시한 2032년 GRDP 100조 원 목표에 비해 다소 실망적.
- 지역소득통계는 몇 가지 강원경제의 문제점 제시. 지역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성장 기여도가 낮은 점,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제조업 기반이 취약, 성장 기여율도 낮아 연관 산업 미성숙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 과도한 이출 구조와 소득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의 재생산 및 선순환 구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점, 자본형성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미흡 등 미래 성장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 지역소득통계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원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지역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투입량과 함께 자본·기술과 노동의 결합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유인할 R&D 투자가 촉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자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함. 조세유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한 이유.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배양으로 정책분권 강화,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우수인력 양성기반 확보도 중요한 과제.

■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경제연구원

-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수적임.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청년층 수도권 집중 → 저출산·저성장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등 청년들의 수도권 러쉬가 심각함. 이는 주로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음.
-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이는 혁신적인 대학과 연구소, 혁신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가능케 하는 벤처금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
-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임.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속도낸다

(내용요약) [바로가기](#)

- 707억 원의 불요불급자산, 40,573㎡의 청사, 3개의 출자회사, 347건의 복리후생정비
-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 차질 없이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 8월말 기준,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0,573㎡의 청사,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음.

* ① 자산건전화, ② 복리후생제도 정비, ③ 부채중점관리(추후 별도 발표 예정)

행정안전부

■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24년 연수직 인력규모 축소없다

(내용요약) [바로가기](#)

- 제도혁신으로 7,500명 학생연구원·포닥 등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정부, 함께 팔 걷어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10월 10일(화)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1,300여 명, 학생연구원 3,600여 명, 박사후연구원 1,400여 명 등

최근 2024년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연구참여 중단 또는 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와 NST, 25개 출연(연)은 불필요한 불안으로 인한 연구몰입 저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았으며, 출연(연) 자체재원(연구개발직립금 등)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NST 소관 25개 출연(연)은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출연(연)의 핵심기능을 유지함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 뉴스브리핑

출처

■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내용 요약) [바로가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전년도 운영 결과 등 국회 상임위 보고 근거 마련

교육부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 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내용 요약) [바로가기](#)

-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지원면적을 6ha에서 40ha로 확대
- 지자체 사업계획서 신청(10.4.~11.14.)을 받은 후 대상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희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